

기록의 역운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

이 영 남*

1. 기록피소사건
2. 역운프레임
 - 1) 자기동일성체계
 - 2) 역운프레임
3. 민주화 담론
4. 제도실천
5. 표준아카이빙
 - 1) 표준 비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2) 제초제
 - 3) 독새플
 - 4) 하나의 표준시스템에서 다양한 표준들의 네트워킹으로
6. <포스트1999>, 또는 새로운 기록실천을 전망하며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교수. 주요 논저 :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푸른역사, 2007;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2012.
▪투고일 : 2013년 12월 18일 ▪최초심사일 : 2013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4일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형성된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포스트1999>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먼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의 변화를 세 개 층위에서 짚어보았다. 우선 담론의 측면에서는 민주화담론, 기록실천에 대해서는 제도실천, 맨 아래 영역에서는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민주화담론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결되어 작동되면서 1999년 이전의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을 교체하면서 합리적 기록권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실천은 1999년 이전의 '문서관리제도'를 기록물관리 제도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물관리제도는 법령의 각 조항별로 삽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조항은 전문지식, 전산시스템, 기록종사자들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버팀목이 되었다. 표준아카이빙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일관된 기록시스템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기록행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기록실천은 현재의 기록시스템 흐름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성장에는 '구조적 그늘'도 함께 성장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운프레임으로 접근해보았다. 역운은 단순히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구조적 맥락을 함의한다.

주제어 : 상징, 기호학, 한국기록관리제도, 대통령기록물 유출, 연구방법, 기록학 담론, 미셸 푸코, 통치성, ISAD(G), 기록관리 표준, 내러티브, 민주주의, 기록서비스, 정보공개법

1. 기록피소사건

2013년 11월 15일, 이 날은 기록피소의 날로 오래 기억될 날이다. 검찰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을 기소한 날이기 때문이며 기록공동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는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조차 없을 것이다. 무능력도 이런 무능력이 없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기록관¹⁾이나 기록학계가 아니라 검찰이 관리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수중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는 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검찰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그치겠다고 발표했더라도 기록공동체는 그 정도 사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동안 기록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기록이었기에 이것을 제대로 하자며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정반대의 사태, 요컨대 기록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심층으로 내려가서 검찰이 기소한 '그림자'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어떤 문제이든 상대가 제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문제시 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한다. 이것이 심층적인 문제화 방식이며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사태의 여러 면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것은 사태의 여러 면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것이지, 주관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매우 협애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기록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기록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1) 여기에서 공공기관기록관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헌법기관기록관, 지방기록관, 중앙,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 기록관 등 공공기록관리법 및 대통령기록관리법에서 설립 및 운영을 정한 기록관을 포괄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공기관기록관이 지금 모습으로 자리난 토양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록이 진정한 위기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것은 커다란 북극곰이 자기 몸보다 작은 얼음 위에서 불안해하며 어딘가를 응시하는 이미지이다. 기록위기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좁다란 얼음 위 북극곰’은 어떨까?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구도로 본다면 의도와는 달리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대통령기록관이 속해 있는 기록공동체가 그 동안 해왔던 ‘과학적 기록물관리체계와 이에 연결된 효율적 기록행위’가 아닐까? 이번 기록피소사건은 어쩌면, 기록공동체 안에서 주류로 행세하는 기록관행을 근원적으로 단절시킬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호재가 아닐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내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이룩한 역사적 산물이지 검찰이나 정치권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 따라서 적어도 두 가지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구축했던 ‘과학적 기록물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비판해 들어가야 할 단기과제. 둘째, 1961년 이후 지속된 ‘효율적 기록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문화를 형성해가는 중장기과제. 이 글은 과제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단행본이 아닌 짧은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 글은 특히 1961년 이후의 역사적 흐름을 다룰 수도 없거니와 그 대안적 논의의 필요성조차 말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둘째 과제는 글의 흐름에 필요한 맥락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한정한다.²⁾

2) 물론 사태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2008년 이후 지속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검찰의 행위와 말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루다보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록공동체 내부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돌이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반구저기(反求諸己)는 기록현장에서 정치적 목적(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의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천항목이 아닐까? 기록공동체는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 국가의 중요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실천해왔다. 결국 기록물이 없는 사회에서 기록물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이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로 의지를 몰아가는 정치행위였다. 따라서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기록관에서 종사했던 사람들, 그 외 기록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한 말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정치행위를 해왔다면, 남은 것은 어떤 형태의 정치이나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면서 정치담론으로 형성하느냐 일 것이다. 이제는 기록은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그 쪽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우선은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진정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기 때문이다. 기록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것은 검찰이 기록을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 자성적 문화에 기반을 둔 대안적 논의가 별로 없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이번 사태가 대통령기록관만의 문제가 아닌 바에야 기록공동체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나아가, 자성적 목소리가 집단화 되고 담론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때 비로소 대안적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는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는 역사적 변증법의 시선으로 내부를 찬찬히 돌아볼 시점이다. 새로운 굵직한 기록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비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이 글의 핵심은 기록공동체 내부 기록관행에 대한 근원적 자기비판이다.

2. 역운프레임

1) 자기동일성체계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 말은 심리학적 맥락에서는 정체성으로 번역이 되고 철학적 맥락에서는 동일성으로 번역이 된다. 지난 15년은 아키비스트 집단이 자기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을 것 같다. 자기정체성은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의 대비를 통한 자기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기록 분류체계가 도서 분류체계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전문지식(savoir)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맞춰 일을 한다면 고유의 목소리와 정체성, 의례가 형성된다. ‘기록학연구’ 같은 학술지, ‘기록인대회’ 같은 공론의 장은 자기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집단적 목소리에 해당한다. 자기정체성 작업은 새로운 집단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기 위해, 또는 특정한 사회적 존재로 출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문제는 과유불급이 아닐까? 이런 지나침에 대한 경계는 역사적 변증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들이 역사가 발전하면서 차츰 질곡으로 작용한다면,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자기정체성 형성 작업을 역사적 변증법의 시선으로 살펴보자.

20세기 후반 철학은 이 지점을 동일성 개념으로 비판한다. 거대한 소용돌이였던 아우슈비츠 사건, 하루 종일 자동차로 달려도 오직 옥수수만 보이는 미국평원, 바퀴벌레나 기생충을 박멸하려는 도시의 강박적 위생처리, 오직 벼만 자라는 논, 암 세포의 무한증식은 자기동일성 체계의 상징적 사건이다. 자기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방식만을 확장하려는 이런 자기동일성 체계와, 기록은 과연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 지난 15년, 기록은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자기정체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임계점

을 넘어서 '부정적 효과를 내는 자기동일성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여기에서 임계점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하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 다루고 싶은 위기감의 원천은 수치보다는 기록의 자기동일성 체계이다.

공교롭게도 두 개의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하나는 기록피소사건이고 또 하나는 제5회 기록인대회(2013.11.1. ~ 11.2)이다. 후자의 경우는 기록의 지평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영역으로 확장하자는 캠페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말하자면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공공기관 바깥으로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잘 되지만 한다면 밖으로 전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앞 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외부 불온세력에 의한 방해'이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나가는 흐름이라는 편의적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생각한다.

자기동일성체계의 부정적 징후 중 하나로 언급할 수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2013년 기록인대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다음과 같았다. 「기록관리, 지평의 확대」. 어떤 지평을 말하는 것일까?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는 지평은 결국 '공공기관 아카이빙'을 모태로 확산해나가는 은유가 아니었을까? '공공기관 아카이빙'은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서 수행하는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적 논의를 위한 가설적 개념이다.³⁾ 1999년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아카이빙을 두고 '공공아

3) 이에 대한 것은 곽건홍, 「일상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호, 2011; 윤은하,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조은성,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 기록관리학과, 2012; 이영남, 「상징아카이빙」, 『기록학연구』 제38호, 2013을 참조했다. 이

카이빙'과 동일시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비판적 접근은 아직 기록학계에서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시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첫째,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아카이빙의 일부라는 점, 둘째, 범위와 분량을 떠나서 '공공기관 아카이빙'과 '기록의 공공성'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 <포스트1999> 테마 중 하나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획하는 것보다도 닳아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동일성 체계란 난해한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공공기관 내부의 특수한 아카이빙 방식을 공공기관 바깥으로까지 밀고 나가려는 무의식적 시도가 자기동일성 체계의 확산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기록의 확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런 해석이 기록학계와 기록현장의 주류적 시선일 지도 모르겠다. 이번 기록인대회가 그것을 웅변할 것 같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초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었다. 한번이라도 공공기관 밖에서 그 곳 현실에 맞는 아카이빙을 해보려고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1999년 이후 열심히 달려가던 공공기관 아카이빙 신작로에서 완전히 멈추어 서서, 생각해볼 일이다. 먹을 것은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는 나눠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기록 지평이 여러 개이고 그 여러 개 지평에서 공공기관 아카이빙과 여타 아카이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면, 적어도 이런 말에 동의한다면, '확산전략이 아니라 경청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경청정책을 펴면서 시선을 돌리고 입장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제 민간영역까지 가서 기록물을 수집해 오는 것부터 멈춥시다. 1999년 법정신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기록물을 가져오지 말자며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아카

논문들이 모두 '공공기관 아카이빙'이란 개념을 쓴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공기관 아카이빙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는 일치한다고 본다.

이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외따로 놀자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제는 어떻게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봅시다. 더 세련되게 말입니다. 둘째,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과 동무되는 것들도 가져올 생각을 맙시다. 오히려 일상에서, 마을에서, 삶에서 기록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것을 지난 15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재아카이빙과 두터운 맥락화’⁴⁾를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이번 기록인대회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꼭 그런 것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다. 새로운 시도가 보였고 거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언급한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99년을 출발점으로 하는 공공기관 아카이빙 방식은 공공기관에 적합하도록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록 방식이다. 공공기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것을 두고 맨손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이 말은 15년 전에 그랬듯이, 공공기관 외부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기록현장에서는 새로운 기록테크놀러지를 마련

4) 재아카이빙(rearchiving)과 두터운 맥락화(thick contextualizaion)의 기록학적 의미는 조민지,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 2014를 참조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개의 기록테크놀러지를 위한 방법론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문제제기에 중점을 둔 것 같다. 특히 ‘기록의 역동성’과 연계되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를 <포스트1999>라는 맥락에서 짚어보면,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 또는 기록학적 내부의 전문적인 논의로서 기록관리’가 아니라 이런 ‘역사성을 부분집합으로 만드는 큰 집합 지향성’과도 닿을 것 같다. 공공기관 내부에 갇혀 있던 기록이 외부로 나올 때(정보공개청구, 기록열람, 전시 등)에도 기록의 역동성이 필요하겠지만, 기록 외부의 다양한 지점(커뮤니티, 마을, 일상)에서 각기 자기 방식대로 아카이빙이 될 때에도 기록의 역동성은 필요할 것 같다. 재아카이빙과 두터운 맥락화는 이런 두 측면에서 ‘기록의 역동성’을 말할 때 유용할 것 같다.

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필요한 아카이빙 방식이 있다면 공공기관 외부에도 그 나름대로 적합한 방식이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이 불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공기관 외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만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느냐 여부가 동일성 체계의 갈림길이다. 벼만 농사짓지 않고 그 벼가 자라는 논을 농사짓는 농부들이 있다. 기록물만 기술하지 말고 그 기록물이 나오는 기록현장도 기술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록은 스스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 기록은 어떻게 아카이빙이 되는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록이 된다. 이것은 기록원론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공공기관 아카이빙 방식으로 기록화가 된다면 시민기록도 시민기록이 아니라, 마을기록도 마을기록이 아니라, 일상기록도 일상기록이 아니라, 모두 공공기관 기록물이 될 것이다. 기록이 과연 공공기관 내부의 미풍으로만 태어났을까? 역사는 공공기관의 행위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역사가도 공공기관의 행위만으로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훨씬 넓고 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바깥에서는 그 나름의 아카이빙 방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 기록물과는 다른 기록이 나올 것이다.

아우슈비츠 사건 같은 역사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예를 들어 독일에는 아리안족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고 집시도 있고 아랍사람들도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계 아리안과 그 나머지로 구분해서 몰살해나가는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철학적으로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구도이자 이성과 광기의 역사이다. 근대산업도 마찬가지이다. 논에 벼만 있기보다는 잡초,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해야 생태적인 자연이라는 것을 배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평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다양한 지평들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지평을 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없이 지

평을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복사(copy)가 될 것 같다.

2) 역운프레임

이런 비판의식을 대안적 논의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의 프레임을 설정해보았다. ‘역운 프레임’은 어떨까? 철학에서 묵직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는 운명이 있다. 운명과 상관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justice)가 있고, 역운도 있다. ‘기록의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기는 하지만, 글의 맥락상 여기에서는 정의를 다루지 않고 역운에 한정해서 다룬다. 역운은 일상적으로는 순조롭지 못한 운수, 또는 좋지 못한 운명이라는 뜻이 있다. 철학적 담론에서는 근대문명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프레임으로 개념화를 해서 쓴다. 역운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작은 시선이 필요하다. 하나는 산업화이고 또 하나는 상관성이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최근 뉴스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감기에도 항생제와 소화제, 기관지확장제, 신경안정제, 해열제 등을 마치 폐렴에 걸린 중환자처럼 한꺼번에 처방 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전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가벼운 감염으로도 각종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병원균에 의해 치명적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⁵⁾

이것은 과다복용 약물의 부정적 효과인 내성을 경고한 말이다. 병원체는 처음에는 약물에 희생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약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진화한다. 결과적으로 세균은 자기를 파괴하려는 항생제에 대항해 과거에 비해 더 치명적으

5) 김성훈, 『생명과 약의 연결고리』, 프로네시스, 2008, 12-13쪽.

로 더 파괴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결국 과다약물 작용은 가만히 있는 세균을 건드려서 더 독하게 진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시점부터는 병원체와 약물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상호기생적인 관계를 맺으며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역운관계는 인간의 몸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끝이 좋지 않다는 불안함을 준다. 약물 개발과 투여는 처음에는 병을 치료하겠다는 선의에 입각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입된 약물이, 바로 이 약물이 병을 부르고 강화시키는 상관성이 ‘약의 역운’이다.

물론 약의 역운은 외따로 존재할 수 없다. 약의 역운은 의학, 병원, 의사, 약사, 약물, 제약회사, 약국 등으로 이뤄진 의료산업을 굴리는 작은 톱니바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산업 시스템을 배제한 약물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의료산업은 자본의 논리뿐만 아니라 자기증식 논리에 입각해서 쉼 없이 확장해간다. 요컨대, 약의 역운은 의료산업 역운을 구성하는 무수한 맥락 가운데 하나이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다음과 같은 지점을 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 뿐인가? 의료산업 역운은 근대 산업문명 역운을 구성하는 작은 톱니바퀴이다. 근대 산업문명은 지난 200~300년 사이에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놀라운 성과는 ‘산업문명 역운’을 생산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극곰 위기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원전산업, 굴뚝산업, 대규모 방목산업, 에어컨산업 같은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하는 역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⁶⁾

이제는 시야를 좁혀 역운의 상관성을 보자. 병원체와 약물이 상관적 관계를 맺고 부정적 공생관계로 진화하듯이 역운은 상관성을 전제한다. 부부는 두 사람이 살 때 그 순간에만 부부이지 헤어지고 나면 남남

6) 역운에 대한 철학적 설명은 이정우, 『기술과 운명』, 한길사, 2001;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이다. 역운은 운명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부부 사이 문제는 어느 일방의 문제일리가 없다. 자식의 문제는 상관적으로 부모/가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학생의 문제는 상관적으로 교사/학교/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권력의 문제는 상관적으로 국민/국가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로 삼는 산업을 경제경영적 개념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산업은 사회적, 역사적, 일상적으로 확장되는 문화적 개념이다. 20세기 후반 철학은 이를 전문지식(savoir)으로 설명한다. 전문지식은 역사적인 개념이기에 초월적으로 통시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을 것이다. 16세기 의사였던 허준도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의술을 말할 때 의료산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현재 의료산업은 의학, 의대, 병원, 의료기회사, 제약회사, 의사, 환자 등으로 산업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산업시스템은 상관적으로 서로를 규정하며 운영된다. 병/환자는 의료산업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면, 의사가 없으면 병/환자도 없다. 병/환자는 구성되는 존재이고 그 주체는 전문지식인 것이다. 전문지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병은 당연히 비율도 높지만 비율의 문제이기 전에 원리의 문제이다. 요컨대, 전문지식은 이런 산업시스템을 촉발하고 구성하고 확장하는 주체가 된다.

화폐를 꼭지점으로 분석하면 자본분석이 되고, 전문지식을 꼭지점으로 분석하면 권력분석이 된다. 자본으로 일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적 사유로 등장한 것이 권력분석이다. 산업의 확장은 대학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한다. 대학의 양적 확장은 '실용학문 증가'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상을 전문지식이 장악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일상은 전문지식을 축재로 바둑산업, 음식산업, 스토리텔링산업, 구두땀이 산업 등으로 점

점 더 산업화되고 있다. 아주 사적인 것 같은 연애, 심지어 발걸음조차도 권력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연애하는 방식이나 걷는 방식이 산업화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상도 산업으로 재구성되면서 역운을 상관적으로 만들고 있기에 일상을 권력의 시선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기록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록산업이 없었다면 이렇게 방대한 기록물도 수집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산업과 기록물은 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5년은 기록이 산업으로 형성된 시기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1999년은 기록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해이다.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로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1999년이 기록의 역사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상징적 기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상징적 기원을 풀어 설명하려면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들어가는 집합적 사건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을 전문지식으로 설명할 때는 전문지식을 구성하는 것들을 끌고 와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전부 다룰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담론, 실천, 아카이빙 테크놀로지”라는 세 개의 권력 구성요소만으로 집합적 사건을 구성하면서 ‘기록 15년’을 역운 프레임으로 진단한다.

3. 민주화 담론

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민주화였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보자. “공공기관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적 행위를 아카이빙하는 것이고 이는 정부 수립 이후 불투명하기만 했던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천명한 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이 그저 기록물을 치장하는 장식품에 불과하

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상징적 문장과 여기에서 흘러나온 기다란 문장들은 맥락과 상황에 맞게 확대되면서 담론의 형태로 돌아다녔다. 기록현장에서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가보다 하고 흘려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과의 차원이 아니라 강제력과 영향력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담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난 15년, 담론작업이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철저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보다 시급했던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성의 문제였을 것이다. 또한 담론작업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희미하나마 담론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은 1999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우선 이런 종류의 담론은 1999년 이전에는 공론의 장에 등장하지 않았다.⁷⁾ 현재와 같은 방향성과 주체를 형성하면서 담론을 만들었다는 것, 또는 담론이 시민권을 얻어 공론의 장에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1999년 이후이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으로 전제를 하든 아키비스트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민주화 담론은 소통의 장을 형성해주었다.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말이 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기록물을 수집할 수 가능성의 조건 중 하나는 담론 소통이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할 수 있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힘을 느꼈을 것이다. 고전적인 정치철학에서는 정치권력의 구성요소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물리적 형태의 폭력

7) 1999년 이전에 담론작업이 없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기록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형태는 다르지만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은 있었다(이승일, 『기록의 역사』, 혜안, 2011; 이영남,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격」, 박사학위논문, 서강대 사학과, 2004 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학, 행정학 분야라는 점, 현재와 같은 기록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이다. 권력이 정당화되고 작동하려면 물리적 폭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권력은 뚜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 물리적인 폭력이 하나의 바퀴라면 또 하나의 바퀴는? ‘모두에게 부과되는 규칙들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여기에 근거를 두는 바퀴이다. 이런 권위를 관장하는 것은 정치담론이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언론, 학교, 종교 등)이다. 민주화 담론은 기록의 역사에서 처음 등장했던 정치담론이었다. 요컨대, 민주화 담론은 아키비스트가 합리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

민주화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던 것은 정보공개운동이었다. 정보공개운동이 없었다면 민주화담론이 이 정도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록물관리법보다 3년 빨리 1996년에 제정되었고 당시 기록과 무관하게 별도의 정보공개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기록과는 출처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기록보다 빨리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운동이 기록에 개입해 들어오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정보공개운동과 기록이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었다. 총론적으로 말해본다면, 정보공개운동의 간섭은 민주화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체에서 논의를 확장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운동은 본래 기록으로부터 나온 자식은 아니었다. 지금도 정보공개제도는 기록영역과 별개의 영역에서도 작동되고 있다. 행정학이나 법학에서도 정보공개운동을 이야기하고 참여연대처럼 기록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에서도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말하자면 정보공개운동은 “기록의 외부에서 온 이물질”이었다. 이 시점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정보공개청구 없이 공공기관기록관의 기록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한 적이 있었을까?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면 시민은 지금 정도의 접속마저 힘들었을 것은 자명하다. 요컨대, 본래적인 의미의 기록서비스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이한 상

황에서 기록담론과 정보공개운동이 접속되었다. 기록담론이 민주화담론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었던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보공개운동이었다. 기록담론이 행정 울타리를 넘어 사회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었던 힘에는 정보공개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정보공개운동에는 명암이 교차한다. 정보공개운동은 기록담론과 상관적으로 민주화담론을 구성했지만, 이런 상관성에서 역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록물에 접근할수록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이라는 문화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시민은 편리성·효율성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다. 공공기관기록관 또한 본래적 의미의 기록서비스보다는 정보공개청구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 지난 15년의 상황을 복기해보면, 정보공개성이 높아지는 것과 기록문화가 신장되는 것과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다. 두 개는 사실 별개의 영역이 아닐까? 정보공개 비율이 높아지면 민주화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록서비스가 확장된다거나 기록문화가 삶에 스며드는 정도가 깊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록관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기록물을 볼 수 있는데 뭐 하러 일부러 기록관을 찾겠는가? 기록물 양이 많아지면 이를 다루는 ‘시장’은 형성될 것이다. 전산시스템, 빅데이터, 스마트폰 앱 등 연관된 시장은 커질 텐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록문화일까?

민주화담론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상관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도 내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카이브 본연의 기록서비스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민주화담론-정보공개청구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시민과 기록관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내고 있다. 시민이든 기록관이든 본연의 기록서비스와는 거리를 둔 채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에만 매달려 서로 기록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 않은가? 갤러리에

직접 가서 전시된 작품을 보아야 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 때문이다. 작품이나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문화, 독서문화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왜 온라인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서점과 도서관까지 가는 것일까? 혼자 읽어도 될 책을 왜 여러 명이 모여서 읽는 것일까? 책을 매개로 한 문화가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시선으로 기록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보공개청구가 기록서비스를 잠식하면서 기록관은 이런 고유한 문화를 상실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편리성을 얻는 대신 기록문화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정보공개라는 훌륭한 제도를 기록문화로 만들어야 하는 기록종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담론을 다룰 때는 담론 아래에 관류하며 토양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다뤄야 한다. 이런 심층적 시선이 필요한 것은 담론만의 표면적 교체는 ‘유행의 변화’에 불과하지 ‘단절’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담론을 비판할 때나 대안적 논의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때는 ‘인식론적 단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식론적 단절은 패러다임 전환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인식론적 단절은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에 따르는 면이 있고, 패러다임 전환은 영미의 과학철학적 전통에 따르면 면이 있어 철학적 논의의 맥락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같은 것으로 보려고 한다.

우리가 인식을 해 나가는 데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단절시키며 도약시켜 나가는지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화 담론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화 담론을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담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후자의 담론은 보다 근원적이고 더 오래된 시간대를 가진다. 예를 들어 전자가 10년의 시간대를 가진다면 후자는 50년, 100년의 시간대를 가진다. 후자는 해당 역사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무의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역사적 무의식, 또는 ‘통치심상’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담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다. 따라서 민주화 담론을 말하는 사람이나 이에 대립되는 담론을 말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견원지간처럼 상극적으로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통치심성을 담론의 자락에 깔고 말과 행동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달랐지만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조선 개국 초기에 태조 이방원과 정도전이 왕권중심이나 신권중심이나를 놓고 체제경쟁을 했지만 그 두 세력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통치심성은 공유하고 있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습관으로 드러나는 통치심성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사회 통치심성 중 하나는 ‘효율심성’이다. 특히 기록에게는 이것이 남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효율심성이 한국전쟁 이후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확장될 때 ‘1960~90년대의 효율적 문서관리시스템’이 주요 매개 고리가 되었기 때문이다.⁸⁾

여기에서 물어야 할 인식론적 질문은, 1999년 이후 ‘과학적 기록관리시스템’이 과연 그 이전의 ‘효율적 문서관리시스템’과 바턴터치를 할 때 ‘인식론적 단절’을 했을까 하는 것이다. 달리 물으면, 효율심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법은 각각 제1조에서 법의 기본정신으로 효율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효율논리는 법조문과 이에 기반을 둔 기록물관리제도과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통치심성으로 작용하고 있다.⁹⁾ 둘째,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8) 통치심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했다. 강미라, 『미셸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읽기』, 세창미디어, 2013;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율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율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이 두 권을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2013~2014년에 걸쳐 강의한 허경의 푸코강의록(미출간); 이승일, 『기록의 역사』, 혜안, 2011; 김웅중, 『페르낭 브로델』, 살림, 2006; 이영남, 앞의글, 2004.

기록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효율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록인대회에서 발표된 기록실천은 모두 훌륭한 내용이었지만, 어쩌면 분야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건만 공유되는 역사적 무의식은 효율심성은 아니었을까? 효율논리는 ‘발전, 확산, 성장, 경쟁, 진흥’과 상관적이다. 일상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실천하는 발표문을 관류하는 것도 효율논리였다. ‘발전전략, 발전방향, 단계별 전략, 협력적 성장모형, 지평의 확대’ 등. 이 말들은 효율사전에 들어가는 어휘목록이다. 지향하는 바의 심층에 효율문법이 작동하고 있다면, 아직 효율 상관성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의로 포장되 된다.” 이 말은 새로운 실천을 하려는 사람들의 선의에 입각한 행동이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이번 기록인대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기록관리 지평의 확대: 민간문화아카이브 진흥을 모색하다”인데, 여기에서 민간문화란 아마도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기록분야가 꾸준히 확대해왔던 공공기관 바깥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마치 미개척지를 개간하러 가자는 구호를 연상시킨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은 땅을 개발의 대상으로 여긴다. 경영학 마인드이자 개발논리이다. 그래서 ‘땅을 놀리는 것’을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어떻게든 ‘놀리는 땅’을 개발해야 한다는 탐욕적 강박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땅은 상징적인 의미라면,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여성이라도 무의식에는 이런 기제가 작동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기록도 발맞춰 가는 것 같다. “아직 기록이라는 타일을 깔지 않은 곳이 있을지 몰라, 우리 그 곳으로 갈까?” 이렇게 속삭여도 이것은 속삭임보다는 구호인 듯 하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개간에 나서는 아키비스트가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것 같다. 공공기록법이나 1999년 이후 기록관리시스템을 ‘과학적

9) 이영남, 앞의 글, 2013.

기록관리 시스템'이라 말해도 저변에는 효율심성이 작동하고 있다.

물론 민주화담론은 시대의 산물이기에 시대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당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있었던 시기였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인물이 대통령이었던 시기였다. 그 후 노무현대통령이 집권했고 민주화 흐름은 이어졌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민주정부 10년' 기간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시절이었다. 기록의 민주화담론이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시대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겨우 '절차'라니?

물론 이 질문은 진작 던져졌고 이를 실천해왔던 흐름이 있다.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던 기록 내부 움직임으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아닌 내용에 관한 것이며 사회 전체적인 대안적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식론적 단절을 말하면서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맥락에서 쓰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패러다임 전환은 지금 당연시 되는 것과 상이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일어난다. 입에 효율을 달고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통치심성 변화는 실질적 산물이며 양적인 축적물이기 때문이다. 통치심성은 비역사적이기보다는 철저히 역사적이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 통치심성은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될 것이다. 요컨대, 인식론적 단절을 사유하고 담론화하면서 새로운 기록담론을 만드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 제도실천

담론작업도 하나의 실천이지만 한 층위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은 따로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도실천에 대해 말한다.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은 ‘기록물관리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한 여정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도화에 방점을 찍었던 시기였다. 공공기록관리법령, 대통령기록관리법령 같은 기본 법령 차원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법령 조항별로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제도(예: 기록물분류기준표, 표준제도, 이관제도)까지. 이런 제도실천에서 기록물은 마치 기록물관리제도라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았다. 실제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 중에는 저인망이라는 게 있다. 저인망은 그물코가 작고 촘촘할 뿐만 아니라 그물이 바다 밑바닥을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심저에 있는 물고기까지 일망타진 하는 그물이다. 어선에서 저인망을 쓰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저인망 사용은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과 역비례해서 물고기를 ‘씩쓸이’ 하면서 치어까지 잡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씨를 말리는’ 위험성을 지닌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인망은 오히려 물고기 산업을 훼손하는 역운을 지닌다. 제도실천은 탁월한 그물망이었다. 그래서 기록물이라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기록물관리제도’를 매우 촘촘하게 꼼꼼하게 만들려는 저인망식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기록과 관련한 사태에 대응하는 기본 패턴이 ‘제도입안, 제도보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실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본다. 우선, 제도실천 역시 과유불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록 분야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상당부분이 제도실천에

할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단 공공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에서도 시급성이든 확실성이든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제도개선이나 제도보완’ 등을 요구했다. 제도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다들 말을 하면서도 가속도가 붙어서인지 관성의 법칙 때문인지 사태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제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정도이다. 우리 법령은 거의 ‘지침’이나 ‘매뉴얼’ 수준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엄존하는데 이는 제도를 저인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때문일 것이다. 저인망에는 역운이 따른다. 요컨대, 법령에 과연 그런 조항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야 하느냐는 비판이 그 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런 저인망식 실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할 것이다. 저인망식 실천의 위험성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제도실천은 기록권력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지속성을 동시에 겨냥하는 작업이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야 있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기록물관리제도가 없었다면 공공기관이 단순히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물관리제도가 없었다면 보유하고 있던 기록물을 단순히 내놓았을 리도 없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 가지적인 성과를 내면서 제도실천은 1999년 이래로 기록공동체 영역의 규범적 실천영역이 되었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판단이 들어간다는 것과 이로 인해 다른 것들은 배제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실천영역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행동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이후 여러 번의 기록위기가 닥쳤다. 특히 2012년~2013년에는 그 동안 쌓아올린 기록의 근간마저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기록학계는 일일이 대응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기에 이런 대응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대안으로 내세운 핵심이 ‘제도보완’이었다는 점일 것 같다. 물론 이 사태가 근원적으로는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문화를 말하기 전에 제도보완을 말해야 했던 것은, 또는 기록문화를 말하더라도 기록물관리제도의 보완을 전제로 말해야 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도보완이라는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예측할 수 없이 불거진 사안이었고 그에 따른 사안별 대응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1999년 이후 형성된 역사적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패턴은 아니었을까? 효과를 보았으니까.

이처럼 제도실천이라는 행동패턴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것은 그동안 이룩한 성과 때문일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기록은 압축적인 성장을 했다. 마치 20세기 후반 한국경제의 축소판 같다. 기록의 보존량, 기록보존시설,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의 양적 확대는 이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과이다. 잠재적인 사람들까지 합칠 경우 기록종사자는 몇 천 명 규모로 늘어났다. 1990년대 후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하던 몇 십 명 직원들을 비교해보면, 그 시절이 낭만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없다. 얼마 전부터 서울시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시작했다. 아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15년 동안 제도로만 존재했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몇 년 안에 현실로 등장하게 될 것 같다. 커다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영향력을 생각하면 다른 광역시도에도 기록관 설립이 현실화 될 것 같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보라,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제도화를 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그 제도적 힘 때문에 성과를 낸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말은 지난 15년 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실천이 제도의 힘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어찌되었든 제도실천은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 여전히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학으로 짚어봐야 한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원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하곤 한

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이익을 얻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때 비용은 회계학적 비용이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다른 개념이다. 만약 A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때 회계비용은 100원이 된다. A 프로젝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비용이 있다. 그것이 기회비용이다. A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고 B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때 B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A 프로젝트의 기회비용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제약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를 따진다. 기회비용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재정정책,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서도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도실천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제도실천에 거의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것이다. 과연, 제도실천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총체를 얼마쯤 뚝 떼어서 다른 곳으로 분배해서 쓴다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도실천에 써야 할 자원의 절반을 뚝 떼어서 다른 곳에 쓴다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향에 닿아 있다. 여기서 자원이란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기록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 열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여하는 시간도 들어간다. 실질적인 시간투여란 취미활동이 아니라 직업적 시간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실천과 연결된 기록 A’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 물음은 ‘제도실천과 연결되지 않은 기록 B’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기록 B에 들어갈 항목은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에도 기록 B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록경험」을 기록화 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경험은 질적 방법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대상이다. 경험은 그 동안 학문의 세계에서 주류 행세를 해왔던 양적 방법론이 일관되게 배제했던 영역

이다. 양적 방법론은 통계, 그리고 통계에 기반을 둔 데이터와 사실을 중요시 하는 방법론이다. 문제는 양적 방법론이 그에 역비례해서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을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배제함으로써 빚어진 불균형일 것이다. 통계작업이 시작되는 순간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 예를 들어 신체기억은 무용지물이 된다. 질적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이 일관되게 배제해온 경험의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결국 질적 방법론은 사실과 경험의 균형을 잡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일 텐데 그러려면 당분간은 질적 방법론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러티브에 한정해서 시리즈 B를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을 읽고 제도를 스터디 할 시간에 내러티브 구성방법을 배워야 한다. 기록물 이관제도 개선 세미나를 할 시간에 자신이 15년 동안 좌절했던 경험을 관능적 손길로 재아카이빙 하는 워크숍을 해야 한다. 주관적인 경험이 객관적인 형태로 외화 되고 유통되려면 내러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요컨대, 기록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험을 기록으로 만드는 것은 아키비스트 내러티브를 아카이빙 하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 아키비스트 내러티브가 향후 많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체 글보다는 에세이 형식의 글을 기록의 공론장에서 허용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을 풍미했던 것은 프랑스 철학이다. 프랑스 철학자들은 에세이를 쓰면서 사유했다. 문화인류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미국 인류학자 기어즈드 에세이 형식의 글을 많이 썼다. 근대학문의 위기를 딛고 나온 새로운 대안이 새로운 형식의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가타리니 고진은 ‘문체가 바뀌어야 사유가 바뀐 것’이라는 간명한 테제로 이런 사태를 설명한다. 우리가 지금 논문체 형식의 글만을 고집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했던가? 논문체 형식이든 에세이 형식이든

기록과 사회에 유용하면 된다.

기록교육 커리큘럼에도 기록 B가 있다. 지금도 구술사 과목이 개설이 되지만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술아카이빙’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 구술아카이빙을 하는 주체의 양성¹⁰⁾, 구술아카이빙 방법론, 구술아카이빙 보존과 관리, 구술아카이빙 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교육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기록교육을 세분화해서 별개의 교육트랙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 분야에 필요한 시리즈 작업을 위해서는 내부로부터 묻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학은 인류학과에서만 가르치지 않는다. 정치인류학, 교육인류학, 의료인류학 등 이제 인류학은 메타 담론이 되었다. ‘기록인류학’은 왜 아닌가?

질적 방법론을 자락에 간 아카이빙 방식은 공공기관에서는 어쩌면 선택사항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바깥에서는 필수사항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 외부에서는 질적 방법론이 기록방법론의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 특히, 현 시점처럼 공공기관 바깥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질적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 바깥에는 공공기관 내부의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특이점이 있다. 그 특이점은 법규적 강제력에 따른 업무행위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 특성과는 대척점에 있다. 은유적으로 비유를 들어보면, ‘보고서’보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제 다시 제도실천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정리해 보겠다.

제도실천은 15년 기록의 역사를 이끌어온 역사적 동력이었지만 역사적 한계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나 역운을 형성하면서, 첫째, 기록물관리제도는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취약점을 노정했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를 돌아켜보면, 기록물관리제

10) 지금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양성과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3년 기록인대회 발표장에서 발표된 ‘활동가 아키비스트’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부분은 5장에서 서술한다.

도는 정치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다. 15년이라면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도실천이 기록의 근간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근간을 허무는 데도 동원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제도실천 위주의 성장방식이 특히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상황은 후자의 부정적 효과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실천이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며 그렇기에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대책 중 하나로 ‘계란바구니 기술’은 어떨까?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서 한꺼번에 나르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커진다. 한번 미끄러지면 계란이 전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개의 바구니에 나눠서 옮기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위험은 분산된다. 이런 위험분산 이론은 경제영역이든 인생영역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개의 바구니에 나눠서 계란을 옮겨야 한다. 제도실천은 이 중 하나의 바구니가 될 것이다.

둘째, 제도실천으로는 기록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제도만으로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도 제도보다는 인식이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종종 흘러나온다. 공공기관 바깥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 마을, 일상, 문화 등의 영역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도가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다. 돈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이러한 데도 이 영역까지 제도실천을 주요 아카이빙 기술로 삼는다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법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실천 방법이다. 법규적 강제력을 갖는 기록물관리제도는 시공간적 제약에 갖는다.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이 영역은 제도실천 대신 포괄적인 맥락의 문화로 접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록물관리제도의 저인망화 경향을 멈추고 이제는 기록문화라는 그물

을 새로 짜야 한다. 지금 그물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유한다. 다만, 이런 물음을 던진다. 그런 그물 말고 다른 종류의 그물은 없는가? 제도라는 저인망보다는 ‘문화망’(Cultural Networking)을 고민해보자. 여기에서 문화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류법에 속하는 문화가 아니라 삶의 독특함과 보편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맥락들의 집합이다. 사람, 마을, 일상에서 필요한 그물은 문화망이다. 물론 문화라는 매일 밥 먹는 습관 등 인간의 신체와 연결되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다. 지금과는 다른 기록테크놀러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록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요컨대, 문화의 시선으로 기록을 보면서 문화의 그물망을 짜야 한다.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했지만 물론 제도실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아카이빙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 기록문화가 성숙해지면 그로 인한 긍정적 파급력도 있을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역운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기록이 공공기관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 말고는 없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물음은 결국 어떤 제한적 유효성을 갖는 제도실천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다. 제도실천에 대한 비판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패턴 또는 아카이빙 기술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깊숙하게 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실천의 한계를 구체화하면서 비중을 좀 낮추자.

5. 표준아카이빙

앞에서 민주화담론과 제도실천에 대해 말했지만 이것들이 기록과 직

접 접촉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엄마와 갓난아이가 맨 몸으로 서로 만나는 것처럼 기록과 직접 접촉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물체적 형태의 기록물이 문화적 맥락의 기록이 되는 지점, 기록이 사람들(특히 기록종사자가 아닌 시민)과 만나는 지점, 기록이 역사와 사회라는 대양으로 흘러가거나 역류하는 지점 등. 하류에 서면 이런 ‘접촉과 개입의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강 하류에서 상류를 올려다보면 상류에서 하류를 내다보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강 하류는 상류로부터 떠밀려온 것들이 쌓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직한 곳’이다. 예를 들어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페트병으로 물을 마셨으면 하류에는 페트병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처럼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하류는 정직한 곳이다. 숨기고 말 것 할 것이 없이 액면 그대로 말하고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둘째, 하류는 대양과 만나는 지점인데 이 말은 바다라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와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여러 지류가 합쳐지긴 했지만 이것들은 모두 동질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바다는 강물과 다르다. 하류는 이제 이질적인 것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접촉의 양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리로 순순히 흘러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때로 ‘이질적인 것들이 역류되면서 섞이는 곳’이다. 셋째, 하류는 대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한다. 대양은 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세계이며 복잡한 곳이다. 만약 기록이 강이라면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대양이 될 것이다. 하류에서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기록을 살펴본다.

1) 표준 비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표준아카이빙과 촘촘한 기록체도는 기록현장에서 기록종사자의 언어

와 행동에 체현되어 기록종사자들의 ‘재량권’을 잠식해가고 있다. 기록 문화는 다른 사람이 아닌 기록종사자들의 재량권에서 피어난다는 점에서 표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런 성찰을 하려면 표준 비판에 몇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7조 및 9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동법령 39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표준화 정책이 적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등이 그것이다. 한편 동법 10조, 11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독립적인 기록정책을 펼 수 있는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은 물론이고 원리상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게도 자신이 정한 표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에 관한 사항은 1999년 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다. 표준조항은 2006년에 법이 전면개정 될 때 추가되었다. 그 후 국가기록원에는 표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표준부서는 국가표준, 공공표준 등을 만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개별적인 표준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용어가 같아서 미리 얘기한 것뿐인데, 이 글에서 말하는 표준은 법 7조 등에 들어 있는 좁은 의미의 표준이 아니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표준아카이빙’은 기록행위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기술로서의 표준이다. 요컨대, 기록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기록물과 직접 접촉하고 기록현장에서 발바닥을 짚으며 행동하면서 기록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 하나일 리가 없는데 왜 ‘그런 공통된 행동패턴’을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일을 한다. 공장이 중국에 있던 한국에 있든, 회사가 같은 다르든, 자동차 공장에서 핸들을 다는 노동자는 매

면 똑같은 행동패턴으로 핸들을 단다. 그것은 핸들을 다는 방식이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자동차 공장의 라인은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되어 있고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매번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핸들을 조립한다. 달리 상상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의 요지는 위로부터의 아카이빙이든, 아래로부터 아카이빙, ‘방향성이 왜 표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표준화된 행동방식, 또는 획일적인 행동방식은 규격화에서 나온다. 도서관에서 사서와 책의 관계, 그리고 책과 독자의 관계도 이런 규격화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분류체계는 10진 분류체계이다.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서울시도서관이든 충청도 홍성의 논밭 사이에 있는 홍동 밝맑도서관이든 역사책은 900번 대에 꽂혀져 있다. 왜 꼭 그래야 할까? 분류체계는 공간배치의 미학이거나 책의 효과적인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책을 꽂고 책을 보는 사람의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개입될 여지가 없다면 그럴 때 우리는 규격화된 분류체계이고 하나만을 허용하는 표준방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표준방식에는 지역성(locality)이나 그 도서관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도서관 종사자들의 독특한 지향성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규격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별성, 지역성을 제거하면서 등장한다. 더구나 분류체계는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중앙도서관으로 상징되는 국가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어 일단 분류체계를 수용하는 순간 달리 도리가 없다. 그 극단은 인간의 행동을 매우 디테일한 수준까지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템플릿’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만약 어떤 도서관 종사자가 어떤 도서관이 새로운 방식의 도서분류 체계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런 규격화에 대한 대항이 될 것이다.

기록은 어떨까? 예를 들어, 국제 기술표준인 ISAD(G)는 26개 기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떤 항목을 쓰느냐 여부라든가, 실정에

맞도록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작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6개 항목을 곧이곧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기록물 정보를 기술하는 방식이 꼭 ‘항목화’ 방식이어야 할까? 논의 수준을 어떤 항목이 적당하느냐의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4개 중의 하나를 고르라는 사지선다형 시험방식과 유사하다. ISAD(G)라는 표준을 비판하는 것은 26개 항목의 적절성이 아니라 ‘항목화’라는 기술방식, 또는 아키비스트의 행동방식에 관한 비판이다. 물론 항목화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기록물을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통계작업도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목화와는 다른 형태의 기술방식’까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ISAD(G)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기술방식을 상상할 수 없는 ‘규격화된 행동 프레임’이 문제인 것이다. ‘항목화’는 하나의 행동을 규격화한다는 점에서 거대담론이 관철되는 방식이다. 이런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록작업장에서 행동할 경우, ISAD(G)가 선택 가능한 것 중의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것 자체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으며, 쓸 경우 기술항목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도 있다.¹¹⁾ 일단 규격화가 되는 순간 그것을 의식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상 새로움은 나오지 않는다.

거대담론(Grand Narrative)에 대한 오해가 있다. 첫째, 거대담론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성의 문제이다. 둘째, 거대담론은 추상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성을 관철하는 행동방식이다. 셋째, 그래서 거대담론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인간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체적인 실행

11) 여기에서 ISAD(G)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표준작업의 대명사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ISAD(G) 방식을 준용해 정리기술 작업을 한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기술작업은 공공기관 아카이빙에서 매우 획기적인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영남, 앞의 글, 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따라서 ISAD(G)에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표준에 대한 상징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선택했다.

력을 가진 권력이다. 권력의 시선으로 근대국가의 성립을 보면 간명하다. 근대국가는 하나의 권력(거대담론, 표준)만을 남기고 나머지 권력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더 길게 본다면, 역사 이래 제국의 통일은 도량형의 통일, 사상의 통일, 언어의 통일 등의 표준작업과 궤를 같이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맥락으로 가져온다면, 거대담론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연애하는 방식(연인에게 요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패턴)을 규제하는 권력이다. 연애행위가 거대담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몸과 몸이 접촉하고 말과 말이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이 표준적인가 하는 것에서 갈린다.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은 일부 사상가들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압을 느낄 때 이에 저항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몇 개의 대안적 사유를 미시적인 것들의 계보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9~20세기의 주된 흐름이 동일성의 체계를 반복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담론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동일성 권력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다양한 인간행동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발바닥 행동이다.

웹에서 펼쳐지는 오픈소스 운동, 표준어에 대항하는 방언운동, 중앙화폐에 대항하는 지역화폐 운동, 입시교육에 대항하는 대안학교 운동 등도 거대담론에 대항하는 흐름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출세교육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교육도 있지 않겠는가? 강원도 또는 강원도 원주시에는 한국은행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지역화폐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일상의 행동과 생각과 직접 닿아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획일성이 아니라 복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발바닥 행동인 것이다.

앞에서 ISAD(G)를 잠시 비판했다. 이것은 기록물의 정리, 기술, 분류의 표준화 경향을 비판하고 다른 이질적인 것은 없는가를 묻는 것이었

다. 분류체계는 기록현장의 무수한 행동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 분류체계를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획일성과 등치되는 표준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거대담론이 형이상학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면, 그것은 인간 행동에 관한 것이고, 그 행동이 디테일하게 통제되는 표준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먼 길을 돌아왔다. 이런 논의를 공통의 테이블 위에 올리기 위해 하나의 은유를 채택한다. 역사와 현실에서 보다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은유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거대담론으로서 제조제’를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조제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요컨대, 농부는 논에서 벼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2) 제조제

충청도의 어떤 농촌마을에 가면 ‘우리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논농사를 짓는다’는 말을 듣곤 한다. 들을수록 이 말은 그저 말의 유희로 불과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반세기에 걸친 그 마을의 역사성과 사람들마다의 진지함이 묻어 있는 지향성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어찌면 이 말이야말로 소설을 쓰기보다는 역사를 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마을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잘 요약해준 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귀를 기울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무시이래(無始以來)로 논에는 벼만 자라지 않았다. 몇 해 전 마을의 아이들과 엄마들, 일부 과학자, 몇 명의 농부들이 조사해보니 마을논에는 약 250여 종의 논생물이 서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논 흙속에 사는 생물로는 실지렁이, 깔따구 애벌레, 거머리 등이 있고 논물에 사는 애벌레로는 무늬강도래류, 죽날도래류, 밀잠자리 애벌레 등이 있다. 논물에 사는 곤충으로는 송장헤엄치게, 물벌레, 장구애비 등이 있다.¹²⁾ 이

제 겨우 자연이 복원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정도라면 이런 추세로 계속 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생물이 논에 서식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논에서 논생물이 사라진 이유는 단순하다.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정정책이나 1960~70년대 이래의 농정 정책에 의해 오로지 식량증산 패러다임이 농촌을 휩쓸면서 논생물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식량증산 패러다임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불러왔다. 오로지 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농사기술의 도입을 부추겼던 것인데, 예를 들어 농약, 제초제 등이 논에 대량으로 뿌려지면서 논에는 벼만 남게 되었다.

“제초제가 어떻게 이리도 빠르게 보급이 되었을까? 만약 제초제가 농민의 전통적인 제초기술보다 못한 기술이라면, 오늘날과 같이 전국에 보급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만큼 환경파괴도 덜했을 것이다. 사실 제초제의 등장은 그 당시까지 오랫동안 이어오던 전통적인 제초기술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아무리 예민한 감각을 동원하여도,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도 제초제를 뿌리면 왜 풀이 마르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농민이나 농촌지도원은 그저 제초제의 가공할 위력에 감탄할 뿐이었다. 제초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벼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에 달렸다. 화학비료는 기존의 경험에 비춰보아 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초제는 어떤 종류의 해악이 끼칠지 경험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바로 이것이 제초제가 낳은 불행의 시작이다.”¹³⁾

지금이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초제가 일본에서 처음 보급이 될 때는 불가사의한 기술이었다. 사실 제초제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무

12) 한국 논습지 NGO 네트워크 엮음, 『논생물 도감- 생명도 밥도 논이 준 선물』, 그물코, 2009

13) 민간벼농사연구소 엮음, 김광은 옮김, 『제초제를 쓰지 않는 벼농사』, 들녘, 2001

기로 만들어진 화학무기이고 여기에는 고도의 테크놀러지가 집약되어 있다. 생명을 전멸시키는 전쟁무기가 논밭으로 들어오면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비극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 마을 사람들이 제초제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을 취하면서 비로소 논과 주변에서는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했으며 논생물들도 서식하기 시작했다.

논에는 논생물만 서식하지는 않는다. 아이들도 논에 들어가 공부한다. 교사의 한 마디에 아이들은 와아~ 소리를 지르며 논으로 들어가서는 물장구를 치고 오리를 풀어주고 논생물을 조사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교육표준(전국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교실,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시간표, 똑같은 시험문제)으로 지쳐있던 아이들에게 논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매우 즐겁다. 논에는 벼, 논생물, 아이들, 농부 이외에도 여행자, 문화예술인들도 들어간다. 사진을 찍는 이들은 논에서 이는 바람을 사진 찍는다. 우리가 만약 논을 식량증산 프레임으로만 본다면 논에는 벼만 있어도 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해야 한다면 새로운 프레임으로 논을 보아야 한다. 요컨대, 생태적 시선으로 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벼농사가 아니라 논농사를 짓는다.

지금까지 제초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주류농법인 관행농법과 이에 대항하는 농법인 생태농법을 대비시켜 이야기를 해보았다. 제초제는 하나의 사물이지만 두 농법의 상징적 대척점이자 분기점이다. 관행농법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다. 2천 년 벼농사의 역사에서 고작 몇 십 년, 길어야 60~70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위험한 농법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두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¹⁴⁾

14) 물론 제초제 외에도 여러 농사기술들이 개량되었고 이런 것들이 접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제초제가 갖는 파괴성과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논의의 균형을 잡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이 글은 농사가 아니라 기록에 관한 글이다. 그렇다면, ‘제초제’라는 상징을 취한 후, 기록에 한정해서 다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만큼 압축성장한 기록의 세계에는 제초제가 없었을까? 나는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제초제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기록이 중요하니 기관 형편에 맞게, 아키비스트가 재량껏, 공무원들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들 하세요.’ 1999년 이래로 기록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공식담론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표준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법령, 매뉴얼과 지침, 감사와 보고, 지도감독, 교육, 시스템 등. 모든 공공기관이 이런 표준시스템 자석에 끌려 들어왔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 아카이빙을 수행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법령으로 강제하고,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통제하고, 감사를 나가고 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커리큘럼과 똑같은 시간표로 교육 훈련시키고,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오직 ‘벼·기록물’만 남기려고 해왔던 것 같다.

기록표준시스템의 철학적 밑그림은 효율성 담론이었다. 이 담론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잉태되었다가 서서히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갔는데 특히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핵심적인 국가통치심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1999년에 공공기록법이 제정되면서 효율성 담론을 비판해야 했다. 물론 어느 사건이든 역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 때나 그 후 15년 동안 효율성 담론은 별다른 비판 없이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요컨대, 효율성 담론의 철학적 기반과 표준화 프로젝트라는 하이 테크놀러지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기록은 15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이롭게 압축성장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공공기관 아카이빙이다. 결국 몇 백 개 몇 천 개 공공기관은 동일성이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컨

베이어 기록시스템'으로 탈바꿈되었다.

당신은 지금 의문을 가질 것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중요한 기록'물'을 남기자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아직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전반적인 인식도 없고 중요한 기록물이 남겨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현실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걸어온 길을 달리 요약한다면 '표준아카이빙이라는 제초제'를 통해 기록물을 다량으로 남기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다수의 아키비스트, 두 개의 학술지, 커다란 기록시장과 기록산업 등으로 '규모의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기록관리 시스템이기도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량기록물 관리시스템이다.

기록을 남겨왔으며 앞으로도 남겨가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이 이렇게 혹독하게 파괴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초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논에서 자라는 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전부일 수 없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려 깊게 농사를 지었을 것이며 그래서 식량증산과 자연보존을 병행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논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예술가들과 여행자들이 들르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식량증산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논을 통제해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벼만 상상하게 가득 찬 논을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벼가 자연의 전부가 아니듯이, 공공기관 아카이빙도 기록의 전부가 아니다. 공공기관 아카이빙은 우리가 취할 기록 중의 하나이다. 우연히 공공기관 아카이빙을 먼저 취했을 따름이다. 이런 우연함을 품고 대륙을 건너야 한다.

이번 기록인대회를 표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는 지금 대륙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바야흐

로 공공기관 바깥으로 진군하는 깃발을 높이 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이라는 대륙에서 비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고 있는 시점에 맞춰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륙을 건널 때는 먼저 다른 대륙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주의자가 될 수 있다.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제국의 렌즈'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 다시 15년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공공기관 아카이빙을 카피하여 공공기관 바깥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공공기관 바깥에서 표준으로 작동된다면 그것은 결국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하이 테크놀러지가 기록의 제초제로 작동하는 아이러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공공기관 아카이빙 역사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아 놓친 것들이 한 둘이 아닐진대, 새로운 대륙에서는 경청부터 해야 할 것 같다.

3) 독새플

어찌어찌해서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공공기관 바깥으로 퍼져 나가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표준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미래의 사실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에서 배울 바가 있으면 배워서 경계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평원으로 가서 독새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자연농법의 효시자로 알려진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캘리포니아 평원을 여행할 때 이야기이다.¹⁵⁾ 그가 관찰한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정원은 갈색평원이다. 의문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가도 가도,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렸는데도 이 땅에는 왜 풀이 푸르지 않고

15) 후쿠오카 마사노부 지음, 최성현 옮김,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자연농법 철학』, 녹색평론사, 2011

갈색일까? 비밀은 독새풀 성장에 있었다. 독새풀 성장사는 매우 긴 역사였지만 그 전개과정은 매우 심플했다. 요컨대, 16세기 이후 스페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면서 목축이 시작되었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주식과 다를 바가 없었던 고기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스페인 사람들은 소와 함께 목축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때 독새풀이 섞여왔다. 독새풀은 처음에는 목초에 끼어 있었으나 결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독점하게 되었다. 어떻게 지배자가 되었을까?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독새풀은 6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원래 초원은 한 가지 풀이 시들어가면 다음 풀이 돌아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독새풀이 워낙 뻑뻑하게 나있기 때문에 다른 풀이 돌아날 수가 없다. 독새풀 열매에는 가시가 있다. 독새풀의 성질은 사납고 나쁘다. 독새풀 가시가 옷에 붙으면 빠지지 않고 속으로 점점 파고들어간다. 개나 고양이가 초원을 뛰어다니다가 찢리면 살까지 파고들어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뽑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일이 새나 들짐승에게도 일어난다.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서서히 캘리포니아 평원에서 사라졌다. 새들도 짐승도 벌레도 인간도 그곳을 떠난 후 독새풀은 평원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마치 잡초, 논생물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논에 벼만 남은 것처럼.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더 큰 문제인 역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대지가 갈색의 독새풀로 뒤덮이면서 비가 내리지 않자 구름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30도 정도의 온도가 반사열에 의해 40도까지 올라갔다. 결국 기온이 상승해서 평원은 사막으로 변했다. 게다가 그 뒤에 등장한 과학농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과학농법은 기계화와 화학화(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법이며 다양한 품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작물을 대량으로 경작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토양은 사라져갔다.

지금까지 세계사적 차원에서 펼쳐진 자본주의적 농업의 역사를 개관

하면서 사막화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시작은 단순했다. 근대의 대량목축시스템이 처음부터 사막을 만들려고 작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럽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육식을 주식으로 하면서 그 수요에 맞추거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럽의 목축시스템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카피가 되었고 규모가 점차 커져 대량목축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불과 몇 백 년 만에 초록색 평원이 광대한 사막이 형성된 원인이었다.

물론 여기에서는 목축이 아니라 기록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독새풀’의 상장을 취한 후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유럽대륙)에서 하던 아카이빙 방식을 공공기관 저 쪽(아메리카대륙)으로 표준아카이빙 방식으로 가져가서 대량기록시스템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의도와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바깥에서 목축을 시작할 때 어떤 ‘기록의 독새풀’이 슬쩍 섞여 들어와 평원 전체를 지배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대륙을 옮겨가서 공공기관 아카이빙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기록테크놀로지(목초)를 가져갈 때 거기에 기록의 독새풀이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없고 어찌면 기록집단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할 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햄버거 시스템이 처음부터 닭을 사육식 공장에서 대량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햄버거 시장이 확장되면서 사육식 공장은 커졌고 그래서 지금은 맥도날드나 KFC조차도 사육식 공장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비단 패스트푸드 산업만이 아니고 근대산업으로서 음식산업 전반의 문제이긴 하지만 패스트푸드 체인은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아카이빙 목초속에 숨겨져 있는 독새풀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독새풀이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성장시스템으로 인해 ‘아카이빙 되지 않는 잡초들’을 빠른 속도로 제거해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초제와 독새풀 이야기를 해보았다. 얘기를 꺼냈으니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록의 제노사이드 효과(Archival Genocide Effect)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다. 벼도 따지고 보면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초제가 벼만 남기도 나머지 잡초들만 제거하는 것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인간이 자기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벼만 남기고 나머지 잡초와 생물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것은 결국 역사의 비극인 ‘제노사이드’와 같은 일이다. 독일인들이 멀쩡히 같이 살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집단학살했던 것이나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마을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비극을 우리는 제노사이드로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벼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벼만 남기고 나머지 같이 어울려 자라던 풀들을 말려 죽이는 것은 제노사이드이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아무리 기록물이 중요하다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기록현장에서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과 우리 사회와 함께 경작할 수 있는 것이 획일화된 방식으로 처리되는 기록물 외에 달리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제초제와 독새풀이 상징하는 기록의 제노사이드 효과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지금 대륙을 옮겨가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사유해야 한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금 멈춰 서서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시경쟁시스템에 아이를 밀어 넣을 수 없는 부모는 대안적인 교육시스템에 아이를 보낸다.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런 대안적 흐름이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카펫효과’(선행자 또는 동시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 깔아놓은 카펫을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이미 취하고 있는 행동들에 주목해서 표준아카이빙을 반성적으로 짚어보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4) 하나의 표준시스템에서 다양한 표준들의 네트워킹으로

표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표준에 대해 성찰하면서 표준의 시선과 구도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것은 유일표준이 아니라 복수표준의 가능성(local standards; localization of standards)에 대한 상상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며, 기록을 이해하는 태도와 정리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훨씬 풍요롭게 기록방법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전망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표준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표준인가? 표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어떤 한시적인 시간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5장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효율심성을 실행하는 표준아카이빙을 공공기관 밖으로까지 밀고 나가면서 기록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지금 하려는 얘기는 국가기록원의 표준사업이 잘 되고 있느니 못 되고 있느니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표준 논의가 어떠한지 하는 차원의 논의도 아니다. 표준이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표준이 적용되는 방식과 네트워킹에 대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기록 전반을 관류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면, 그런 효율성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식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은 매년 각급 공공기관이 써야 할 기록물정리지침 만들어 그 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매년 생산현황보고를 받고 있으며 기록물을 이관 받는다. 이런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한 비판이 기록현장에서는 많다. 이런 비판을 단순히 일선 기관에서 불편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으로 왜 공공기록물관리체계는 그런 표준아카이빙을 선택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른 가능성이 현실로 보일 때 더 이상 표준

아카이빙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아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아기에 자기원형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 시기에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을 유아기에 제대로 익혀야 험난한 세월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다. 물론 사람은 이후 계속 변화하면서 원형을 변형시켜 나간다. 특히 13살 무렵까지가 중요하다. 10대 후반쯤 되면 벌써 자기 주관이 확고해져서 뭘 고친다는 게 매우 어렵다. 심리학에서는 '10대에 완성된 것'을 바꾸는 것을 사생결단을 요하는 일로 본다. 요컨대, 사람은 외부로부터 바꿀 수는 없고 내부로부터만 바꿀 수 있다. 방식은 단순하다. 자기 내부에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이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리면서 점차 변화해가는 것이다.

공공기관기록관은 벌써 10대 후반이 되었다. 이 정도 나이라면 외부로부터의 개혁 목소리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거대한 기록 산업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뭘 고친다는 게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불가능할 게 없다는 희망도 품어야 하지 않을까? 한 겨울에 뽕뽕 얼어붙은 빙판길로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해가 내리쬐었던 저 끝에서 살짝 들면 전체가 들리는 법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본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우선 내부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만든 표준을 밀어내면서 확장하는 방식을 멈춰야 한다. 일원적 지배방식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는 지배를 기본으로 하므로 지배방식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외부에서 표준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만든 자잘한 표준들'(local standards), 이런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은 이질성 포용작업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

앞서 국가기록원의 특정 부서가 표준아카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은 공공기관기록관 자체가 표준아카이빙의 산물이자 재생산 도구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할 것 같다. 공공기관의 기록행동 하나하나가 표준아카이빙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질성을 포용해 가면 어떨까? 각각 커뮤니티마다 그곳에 맞는 표준(local standards)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화폐의 유통비율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한국은행권 유통비율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50% 화폐유통 비율은 n개의 지역화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해가는 것이다. 기록표준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국가기록원에서 표준을 담당하는 부서나 수집, 보존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될 것 같다. 수집-보존-표준은 속성상 기존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간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면 어떨까? 커리큘럼을 공공기관 아카이빙 방식으로 미리 짜놓고 훈련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각각 기록현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짜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교육. 이런 전환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마을도서관과 협력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아카이브 커리큘럼을 짜면서 거기에 맞는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기록관을 지탱하는 한 축이 '시민에게 기록을 서비스하는 문화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새로운 차원의 기록교육은 민관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기록작업이 될 것 같다. 다리를 통해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고 성과가 쌓이면 표준 담당부서에서 기록표준으로 포괄해가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간섭 없는 지원은 민관 협동작업의 기본문법이다. 기록이라고 기본문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표준을 포괄하는 작업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상이한 표준들을 포용해서

표준을 이질성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더 큰 표준을 만들어내야 작업 (Big Standards Project, 또는 Salad Bowl Program)이 아닐까?¹⁶⁾

이상으로 3장~5장의 논의를 마친다. 장황하게 이야기한 면이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기록에 위기가 찾아왔고 위기는 내부로부터 자성과 반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몇 개의 층위로 절단해서 분석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시점이다. 적어도 1999년 이후 역사적으로 두텁게 형성된 기록시스템에 대한 근원적 반성과 대안적 논의를 하면서 〈포스트1999〉를 전망해야 한다.

6. 〈포스트1999〉, 또는 새로운 기록실천을 전망하며

이제 새로운 기록실천을 전망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검찰 발표 며칠 후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회의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날 기자회견장에서 마음이 무척 복잡하고 착잡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서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분류 및 이관작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8-2009년 ‘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앞으로 지루한 재판과정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랬던

16) 샐러드 볼(Salad Bowl Program)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다. 그런데 단순히 세계 각국의 인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이 사회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이런 역사성을 딛고 평화로운 사회로 향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처음에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이것은 실패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샐러드 볼 프로그램이다. 차이를 인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공존시키는 이런 정신이 지금 기록 분야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것 같다. 2008년 이후 지속된 ‘노무현대통령 기록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선에서 본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서 ‘개’가 된 것은 아닌가 싶은 자괴감이 당시에는 더 컸다.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왜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으르렁대는 개를 만나면 돌맹이 같은 것을 던져서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 후에 도망치곤 했다. 개는 상대가 누구이든 먹을 것을 던져주면 차지하려고 서로 으르렁대는 면이 있다. 그 날은 엉뚱한 곳에서 으르렁대는 개가 된 것 같았다. 지난 5년 동안 여러 대응은 주체적이지 못한 채 수세적이지는 않았을까? 부당한 권력이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거기에만 대응하느라 너무 바빠서 문제의 본질을 놓쳤던 아닐까? 한국현대사에서 검찰이 독재자에 굴종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의례히 검찰은 개에 비유되곤 했었다. 그러나 그 날은 검찰이 아니라 내가 개가 된 것 같았다. 검찰이 고기가 던진 땅바닥으로 얼른 달려가서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씹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낱의 우울이었다.

물론 개의 비유는 당시 2008년부터 그 날까지 동분서주 했던 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합의한 바도 없을 뿐더러,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경과를 디테일하게 정리하면서 분석해서 나온 사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학계에서 그렇게라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였고 마땅히 외쳐야 할 목소리였다. 이 글은 검찰발표 내용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의 비유를 들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비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 개와 달리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공격한다고 한다. 사자는 개처럼 주위를 딴 곳으로 돌리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는 점에서 역사의 거대한 사건을 품을 만하다. 한국현대사의 혁명적 사건들은 사자의 기개로 기록된다. 4.19도 그렇고 6.10도 그랬다. 이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민중이 자부심을 가졌다는 점, 변화의 희망을 품었다는 점, 그리고 독재 권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기록도 자유의 여정을 떠나려면 '사자되기'(as if living lion archivists)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사자되기, 또는 '거두절미하고' 사자가 되어 아카이빙을 실천하는 문화의 첫 걸음은 '사사로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 의식을 담고 있는 이 글에서도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사실이 아니라 경험한 것들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을 내비쳤다. 그것도 학술적 논의의 보이지 않는 배경이 아니라 아예 전경으로 삼아보려 했다. 과연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생각이란 뭘까? 이것은 술집에서나 내비치는 것이고 논문 같은 곳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사사로운 생각이란 것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사롭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에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새로운 역사서술 흐름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일상사적 접근이나 신문화사적 접근이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저항을 새롭게 해석한다. 예를 들어, 갑오농민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저항이지만 비록 양반과 지방관아에서는 굵실거리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반과 지방관을 험담하며 소문을 내는 것도 저항으로 해석한다. 험담은 비겁한 것이고 죽창은 용감한 저항이라는 구도만으로는 복잡한 인간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새로운 역사서술에는 배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한 인간이든 사회적으로든 자기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해 반응하는 일체의 것을 저항으로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사로운 생각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에 배치시켜 보았다. 그렇다면 2013년 어느 날 기자회견장의 사사로운 생각은 매우 폭넓게 다뤄볼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은 한 인간의 느낌, 감정, 정서, 의지, 사고, 인식 등 정신행위 일반이다. 만약 사실만을 강조하며 거기에 유일한 가치를 둘 경우 생각은 주관적인 어떤 것이 된다. 새로운 프레임에서는 꼭 그렇게만 볼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행위를 하면서 외부세계와 조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며 아카이빙을 하느냐가 중요한 기록학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포스트1999〉의 기본 줄거리는 효율심성과 과학적 기록관리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붕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정치적, 윤리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1999년 이후 등장했지만 이번 기록피소사건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던 기록종사자 윤리강령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기록윤리학’을 세워야 한다.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기록물은 뒷전으로 물리고 기록윤리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앞서 기록공동체는 이미 1999년 이후 정치행위를 충실히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역사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껴안고 넘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정치적 맥락에서 윤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첫 걸음이 정치철학이나 서구에서 담론을 수입해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5년 동안 이 판에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로운 자기감정을 드러내면서 ‘재아카이빙과 두터운 맥락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아카이빙 한다는 것, 그것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정치적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기도 하고, 둘째는 주체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셋째는 엄밀하게 지식을 만드는 연구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사로운 생각을 기록의 주요 사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윤리적 접근행보를 취한다는 것이다. 거대담론을 비판하며 대안적 담론으로 등장했던 20세기 후반의 권력담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보를 해왔다. 기록경험의 자생적 담론형성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¹⁷⁾

17) 당초 이 글을 작성할 때 비판보다는 대안적 논의에 방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분량이 너무 많아 초고의 한 장만 여기에 싣게 되었다. 대안적 논의로 해보고 싶었던 세부 주제는 ①커뮤니티 아카이브(기록의 상대성, 장소성(locality)) ②일상 아카이브(권력의 그물망), ③기호와 상징, ④기록경험과 내러티브 ⑤또 다른 기록주체로서 기록활동가(활동가 아키비스트 active archivists)였다. 대체로 이번 기록인대회에서 발표가 되어 시의성도 있다고 보았으며, 무엇보다도 기록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이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세부주제를 '기록의 공공성'으로 수렴시켜 쟁점을 형성해보려고 했었고, 이런 논의를 통해 <포스트1999>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다. 이 글의 중간 중간에 맥락에 맞게 대안적 이야기를 섞어보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글의 상당부분이 빠져나가서 예를 들어 '문화망'이나 '권력의 그물망' 같은 새로운 기록개념은 언급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ABSTRACT

Postmodernism and Korean National Archives System since 1999

Lee, Young-Nam

This essay focu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Korean National Archives System(KNAS) since 1999. We think that KNAS could establish the backbone with basic records law on 1999. It's right. But it is not enough for explaining the full historical growth, there are some factors below the growth. This essay tried to the basic three factors below. That means the the demonstration discourse, archival system practices, and archiving technologies in the contexts of the unique standard by the basic records law. These three factors have been the powerful engine for the take-off of KNAS since 1999.

However, the powerful history has shadows of growth. This essay narrated the shadows by the frame of 'counter-destiny'. The most dangerous shadow is the loss of archival cultures because the KNAS has been composed of efficiency mentality. That means that KNAS has no unique archival culture for citizenship. So, this essay tried to talk about 'Post1999' to Archives Community.

Key words : Symbol, Semiotics, Korean archival system, Presidential records disclosure, Research methodology, Archival discourse, Michell Foucault, Governmentality, ISAD(G), Archival standards, Narrative, Democracy, Archival Service, Freedom of information law